

미래지향적 해양오염 복구방안 마련돼야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을 초래한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맞은 지 벌써 1개월이 지났다. 지금은 검은 기름이 뒤덮였던 해수욕장과 해안선 등 사고현장 일대는 기적과 같이 제 모습을 되찾고 있다.

해외의 해양오염 전문가들조차 이 같은 변화를 놀라워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중앙의 방제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절망스러운 현실에도 좌절하지 않고 해양오염 피해의 확산을 온 몸으로 막아준 지역 주민과 전국 각지에서 찾아 온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다.

이제 피해지역 주민들은 전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됐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제 성과만 가지고 서해안의 해양오염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으로 보서는 안 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적 방제 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인 피해 복구와 지역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첫째, 지속적인 해양오염 방제 노력과 함께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동안 긴급방제로 많은 양의 기름 찌꺼기가 수거됐으나 아직도 엄청난 양의 기름 찌꺼기가 바다 깊은 곳이나 바위 틈 그리고 모래나 갯벌 속에 남아 있다. 남아 있는 기름 찌꺼기를 모두 제거한다고 해서 해양오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해초와 어패류, 해양 미생물에 미친 기름오염의 피해를 밝혀내고, 회복하는 일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서해안 지역의 생태환경 피해와 영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연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생태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피해지역을 해양생태환경의 보고(寶庫)로 만드는 데 치중해야 한다.

둘째, 피해어민 및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167km에 달하는 해안선과 5656ha에 달하는 어장과 양식장, 60개가 넘는 섬이 기름유출의 최대 피해지가 됐고 피해지역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수만 명의 생계 터전인 갯벌과 연안 해역이 오염돼 더 이상 조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해양오염 피해는 수산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해수를 이용한 염전과 치어 종묘 및 치어 양식장과 수산물 판매상, 횃집 및 요식업, 숙박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큰 피해가 초래됐다. 그러나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보상은 국제법규에 따르도록 돼 있어 과도한 증거자료가 요구되고 오랜 기간이 소요돼 피해주민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응과 함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생계기반 복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해양오염의 위기를 지역 이미지 쇄신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해양오염은 수산업과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태안과 주변 서해안 지역의 명성에 측정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했다.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이벤트나 장소 마케팅을 통해 서해안 지역을 다시 찾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서해안 지역에는 해수욕장과 관광지, 콘도, 펜션 및 민박 등 관광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사계절 관광이 가능해 국민적 호응도를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서해안 지역을 세계적 수준의 청정한 해역과 해안관광지대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데 치중해야 한다. 미래지향적 방재체제 구축과 획기적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청투데이 1월 11일자 11면

국책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의 개편 및 경제, 교육정책 등 핵심적인 국가정책들이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 따라 기본 틀까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큰 틀의 변화 속에서 수많은 기존의 국가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도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지속적인 추진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비롯하여 태안기업도시,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 장항산업단지 정부대안사업, 보령신항 건설 등 굵직한 국책사업이 추진 또는 예정되고 있는 충남지역의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책사업은 국가적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사업이긴 하지만 지역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사업이다. 생산 활동과 주민의 실생활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치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있어 오랜 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관되고 안정된 추진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리고 국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중단되면 수많은 지역개발사업 및 민간투자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충남이 2007년 한해 거둔 눈부신 경제성장과 외자유치 성과는 도정의 탁월한 리더십과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 잠재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충남지역이 지금까지와 같은 성장추세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래의 계획대로

국책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 국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보장돼야 한다. 특히 그동안 일부 정치적 이견이 있었던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야 한다. 다행히 대통령 당선자는 행정도시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천명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해 왔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세종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확인하여 지역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있다. 이 밖에 태안기업도시와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 장항산업단지 정부대안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은 행정도시 건설 못지않게 중요한 국책사업이므로 지속적 추진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국책사업이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세종시가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충청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국제과학도시기능을 강화할 것을 공약하였다. 다른 국책사업의 추진도 지역경제발전과 주민생활의 개선에 직결될 수 있는 보완책을 만드는 데 치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지지부진 했던 보령신항 건설도 조속한 추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충청권 국제과학 기술벨트 구축, 금강벚길 복원, 충남도청이전 신도시건설,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세계 군 평화페스티벌 개최 등에 대해서도 조기에 가시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충남지역의 국책사업의 지속적 추진여부는 지역의 미래발전은 물론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까지 결정하는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중도일보 1월 14일자 7면

충남 도청이전 신도시의 비전과 발전과제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충남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도시개발기본구상,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및 도시개발사업자 지정 등이 이루어졌다. 이미 개발계획(안)에 대한 현상공모가 실시되었고, 세부적인 개발계획 수립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가 주도한 “도청이전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창의적 도시개발기법의 적용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충남 도청이전 신도시는 기존의 많은 신도시와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는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건설하는 특별한 성격의 미래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정책비전과 도시 성격에 걸 맞는 공간적 매력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치중해야 한다.

첫째, 도청이전 신도시는 지역의 정치, 행정 및 교류의 중심지인 충남의 수도(首都)로서 상징성과 정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인 신도시 건설에선 도시의 기능적 효율성, 편리성 및 쾌적성 확보가 핵심이다. 그러나 지역 수도의 건설에서는 실용적 도시기능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주민을 통합하는 기능까지 함께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도민의 일체감과 연대감을 이끌어 내고, 주민 상호간 교류·협력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계획은 충남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현대 도시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도청이전 신도시는 충남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업무중심의 신도시로서 차별적인 경쟁력을 지녀야 한다. 대부분의 신도시는 주택문제 해결과 도시개발수요의 대응을 목적으로 한 주거용 도시로 건설됐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신도시들이 도시개발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주변에 주로 건설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주거용 신도시는 건설이전에 풍부한 수

요를 확보한 상태에서 아파트 중심의 도시를 건설함에 따라 도시의 개성이나 건설기술상의 경쟁력은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충남 도청이전 신도시는 기존의 수요 대응형 신도시가 아니라 도시개발수요를 스스로 창출해가면서 건설해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도시이다. 이러한 과제를 인식하고 충청남도는 이미 유수의 대학을 비롯한 민간기업과 투자 유치에 치중하여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요창출형 업무도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도시의 공간적 매력과 함께 다른 신도시가 갖추지 못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다.

셋째, 도청이전 신도시는 환경 명품도시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환경 도시 건설을 천명한 신도시들이 대부분 획일적인 아파트 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환경도시의 지속가능성은 녹지공간의 확대나 쾌적한 경관의 확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시 건설과 관리과정에서 자원이용과 오염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원절약형 도시구조와 시설 기반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시전체를 관통·순회하는 도보 및 자전거 전용도로망의 건설, 환경친화형 대중교통시스템 도입 및 불필요한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고밀도 복합용도 지구 개발, 그리고 에너지 및 물 자원의 절약을 위한 순환형 재활용 시스템 도입 등을 신도시 개발의 계획단계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청이전 신도시는 첨단정보·기술 기반의 미래도시이다. 미래도시는 최첨단 정보·통신 및 각종 응용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능형 도시를 의미한다. 미래도시는 주거, 상업, 업무, 교육, 의료 및 여가기능이 첨단 정보·통신 및 교통기술과 결합하여 하나의 지능형 공간 시스템의 형태를 지닌다. 전통적인 도시기능의 공간적 분리와 분화 및 도시공간의 이용패턴이 변하면서 도시공간 구성 원리와 도시개발 패턴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청이전 신도시는 첨단정보·통신 및 응용기술의 진전에 따른 미래도시의 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데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주었으면 한다.

화룡점정(畫龍點睛)이란 옛말이 있다. 모쪼록 도청이전 신도시가 충남의 얼굴을 그리는 마지막 점으로 비유될 만큼 200만 도민의 염원을 고스란히 담아내길 기대한다.

*충청투데이 3월 14일자 20면